

176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확정되며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에 접어드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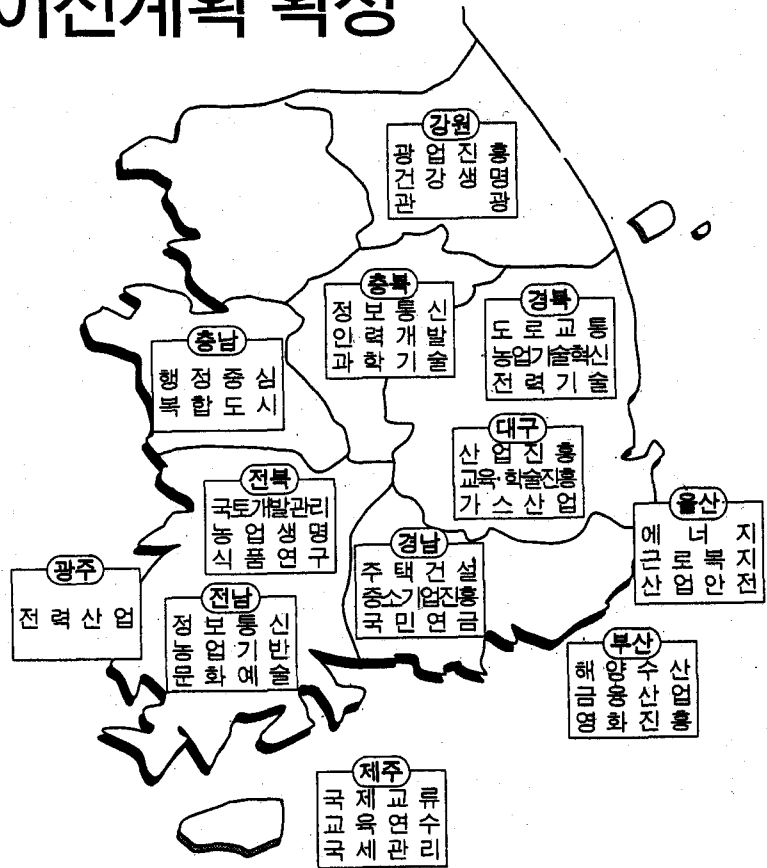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으로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7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잠정 확정, 발표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하기로 했다.

이전지역이 확정된 176개 기관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됐으며 그동안 높은 관심을 불러모았던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은 각각 광주와 전북으로 결정됐다.

■ 시도별 배치내역

구체적인 시도별 배치내용을 보면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 기능군과 대한주택보증,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배치됐다.

또 대구시에는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지원1 기능군과 교육학술기능군 및 가스공사·한국감정원 등 12개 기관이 이



전된다.

광주시는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유치하게 됐으며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기능군, 산업안전공단과 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복지기능군을 비롯, 11개 기관이 할당됐다.

강원원에는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기능군과 건강보험공단 등 건강생명기능군을 포함, 13개 기관이 배치됐으며 충북은 정보통신1 기능군과 인력개발기능군, 기술표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됐다.

전북으로는 농원지원1 기능군과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2 기능군 및 정보통신2 기능군 등 15개 기관이 옮겨가게 됐다.

경북에는 도로공사·건설관리고사 등 도로교통기능군과 농업지원3 기능군,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기관이 이전되며 경남에는 주택공사·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주택건설기능군과 요업기술원 등 산업지원2 기능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이 배치됐다.

제주도로는 국제교류기능군과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교육연수기능군을 비롯, 9개 기관이 이전된다.

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23개 정부소속기관은 앞으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이 확정될 예정이다.

■ ■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11개의 시·도에 각각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 집단 입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월 말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을 지자체에 시달, 9월 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9월말까지는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과 관계부처 장관 및 12개 시·도지사가 체결한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혁신도시 이외지역으로 이전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까지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옥 매각 및 새 사옥 마련시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방안이 확정된 이후 이전을 지연시키는 기관이 생겨날 것에 대비, 예산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총괄하고 혁신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추진단(단장: 차관)을 설치하는 등 실무추진 조직을 갖추기로 했다.

■ ■ ■ 자원조달 방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105개 기관은 기존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청사를 임차해 사용중인 기관은 공동청사를 신축하거나 BTL방식 등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전적지를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하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이전부지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각에서 땅값이 높고 입지가 좋은 경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떠나야 할 건물과 토지 등을 모두 매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병직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전적지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면서 이전대상 기관은 확실하게 사옥이나 이전적지를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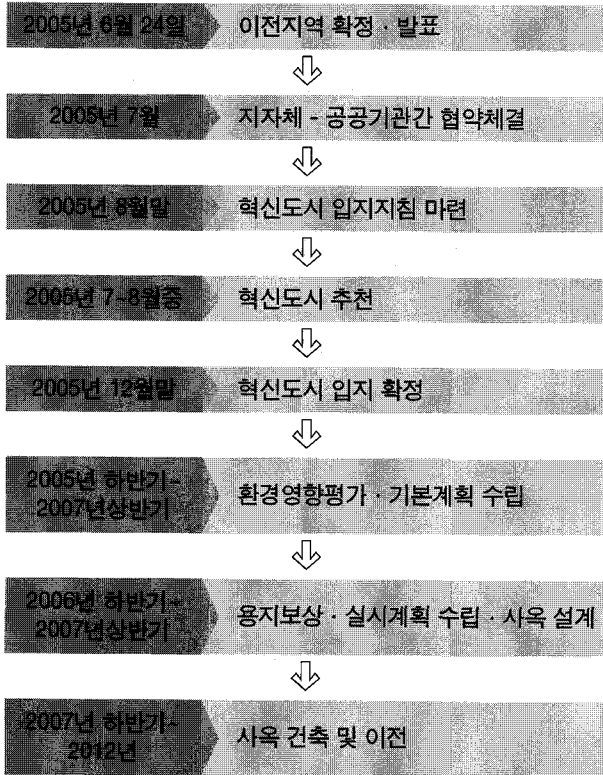
또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비는 정부에서 산업단지 지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 ■ 이전기관 지원책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 등을 돕고 법인세도 민간기업에 준하게 감면해줄 계획이며 이전기관 직

앞으로의 일정



원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은 물론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전기관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관건인 현 사옥의 매각과 새 사옥 매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기존 사옥 및 부지는 자체 매각,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매매각으로 이전에 차질이 생길 경우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시가기준으로 매입하게 되며 손실이 발생할 때 수지상황을 고려, 국고지원을 하기로 했다.

토공이 매입하게 되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새 사옥 마련시 재원이 부족할 때에도 정부가 부족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정부투자기관 외에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 50% 이상 출자법인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전 뒤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이 주어진다.

새 사옥 매입시에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매입 뒤 5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농지·산지·초지를 전용해 사옥을 신축할 때는 농지조성비 50%를 감면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초지조성비는 10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에는 기관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직원 지원책

직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직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택지내 용지를 우선 공급하며 기숙사 건립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 전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혁신도시내에 특성화 고교 특목고, 영재교육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며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성방안

앞으로는 조성될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교류 하는 수준높은 미래형 도시로 꾸며진다.

혁신도시는 전체에서 구성원간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프라와 아메니티가 구비된다.

시·도별 기능군 및 기관 배치내용

부산시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대구시	산업지원1 기능군(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기능군(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 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전기관(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광주시	전력산업(3개)	한전, 한전기공, 전력거래소
울산시	에너지기능군(4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복지기능군(5개)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기타이전기관(2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강원도	자원개발기능군(3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청북도	정보통신1 기능군(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라북도	농업지원1 기능군(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국토개발관리기능군(2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라남도	농업지원2 기능군(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정보통신2 기능군(5개)	정보통신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기타이전기관(7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경상북도	농업지원3 기능군(4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도로교통기능군(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경상남도	산업지원2 기능군(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택건설기능군(3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기타이전기관(5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제주도	국제교류기능군(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기타이전기관(5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도시형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업무, 문화, 스포츠·여가시설 등을 보행자물 주변에 배치하고 미래형 도시에 걸맞은 첨단 교통·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충분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웰빙 공간을 만들고 종합병원의 신설 및 이전도 적극 지원된다.

무엇보다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고 정주할 수 있도록 매력 있고 쾌적한 주거·여가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와 독립 신도시형인 혁신도시로 구분돼 개발된다.

도심 인근에 입지하도록 하는 재개발 방식은 기반시설비는 적게 들지만 규모는 작게, 신도시형은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돼 대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2개 이상의 혁신도시 건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건설수요는 어느 정도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건설수요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전기관의 건물과 부지의 매입 및 재개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전이 본격화되면 이전기관의 건물과 부지의 매입 및 재개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전이 본격화되면 이전기관의 사옥 신축사업도 예정돼 있다.

사옥 신축은 현재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공동청사를 신축하거나 BTL 방식이 활용돼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에 걸쳐 11개 이상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단지조성과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기반시설비는 인구 2만명이 들어서는 50만평 규모의 신

도시형 혁신도시의 경우 700억~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인구 1만2천명 및 3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형은 400억원 수준, 인구 4천명의 10만평 규모 재개발형은 300억원 수준의 기반시설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혁신도시에는 주거단지는 물론 기관을 따라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관업체들의 사무용 건물 등 상업용 건물도 들어서게 된다.

학교와 관공서 등의 지원시설도 필요한 데다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문화·체육시설 녹지공간 등이 충분히 지어진다.

도시조성 과정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사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해 재경부와 행자부, 농림부 등이 공동 협력하게 된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근의 개발 여력이 풍부해지는 부가효과도 발생하며 혁신도시 이상의 건설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 ■ ■ 건설업계 파급효과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영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전 대상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 가운데 주택공사는 올해 예산이 9조1천억원에 이르고 토지공사 5조6천억원 한국전력 3조6천억원, 도로공사 2조3천억원, 농업기반공사 1조5천억원 등 5개 기관의 예산만 20조원이 넘는다.

이들 기관은 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투자비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이들 주요 발주기관들의 움직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이며 오는 2012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공기관 관리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